

<2014 희망서울 장애인 인권포럼 토론회>
장애인 인권의 실효적 확보방안

- 일시: 2014. 4. 18(금) 14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실
- 주최, 주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후원: 서울특별시

1.개회선언

○사회자 이권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한두 분이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 시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 희망서울 장애인 인권포럼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잠시 앉으시기 전에 현재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성동구에서도 활동가가 없으시는 동안에 화재로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방금 들어보니까 송파에 있는 호흡기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호흡기가 빠지는 바람에 119를 급하게 불러서 뇌사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수백명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에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낙 현장에서 예민한 문제들이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들 오셨는데요.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크게 의의를 두지 않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울행정부시장님이신 김상범 부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오셨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배영호 서울시 장애인명예회장님도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부회장님도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패널분들은 따로 좌장님께서 소개를 하실 테니까 내빈소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강원 사건을 통해서 시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감한 주제지만 기회를 주신 서울시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최측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이신 양원태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인사말

○양원태(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녕하십니까? 양원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장애인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은 비극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희극으로. 하지만 결코 희극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결코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진도해상의 여객선

전복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승객을 돌보아야 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어린 학생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서 엄벌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자신한테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절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무책임함, 무능함을 용인한다면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까지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길한 예감이 사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이 되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인해학교 성람재단이나 최근의 인강재단에 이르기까지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 착취와 인권유린은 수십년째 되풀이되어왔습니다. 이처럼 일상화된 비극 앞에서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만 전수조사다 뭐다 하면서 일회적인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한 장애인께서 화마에 쓰러져 가셨고 오늘 알려진 대로 호흡기장애인 한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고 합니다. 화마에 쓰러져 가신 그분의 사고는 더구나 자립생활 체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 역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꾸준한 의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함, 무능함을 용인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의 열악한, 절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벤트의 하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화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속적인 실천의 한 걸음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원해 주신 서울시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김상범 부시장님, 김성조 의원님, 그 밖에 모든 내빈 여러분, 패널 여러분, 특히 함께해 주신 장애인분들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시간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실 진도 해난사고 실종자 여러분들. 꼭 살아돌아오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기원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권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방금 바쁜 걸음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서울시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4월 20일자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념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기념삼아 3년째 저희에게 토론회의 기회를 주고 계신데요. 김상범 행정부시장님 모시고 첫번째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축사

○**김상범(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게 우리 40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위한 것이 무엇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동안 많은 제안이 됐고 또 방안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었지만 사실 아직도 가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다수와 소수의 구별 없이 그 사회에 똑같은 참여,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양원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강재단 사태라든가 성수동에서 일어났던 자립시설의 화재 사건, 그런 걸 보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했고 또 2월달에는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 이제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첫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생각해 보는 첫 출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허심없이 받아들이면서 빠른시일 내에 누구나가 서울시에는 똑같은 참여와 기회의 평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 여기 계시는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살고 또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 김태희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룩해낸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활동하신 경험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많은 정책적 제안들을 승화시키면서 이 서울이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권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다음은 진성준 국회의원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진성준(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진성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또는 형식적인 차원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 실질적인 내용적인 민주주의로 진전해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이나 복지국가, 특히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요구, 이런 것이 다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또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나타나는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들을 보면 이게 다 무난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결국 정치의 문제이고 또 국가 권력, 또 정부의 문제다.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처참한 후진성을 극복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권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국회의원이 못 됩니다. 그저 마음으로 성원하고 또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행세할 수 있는 의결권 한 표, 좋은 방향에 던지는 사람에 불과한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문제가 그런 기본적 인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번 주간을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고 내일모레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도 앞바다에 실종자들이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내일모레가 아니라 당장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권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현장에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론회 전반을 리딩하시는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패널분들은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토론회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뜻깊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이용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 그중에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조금의 어떤 큰 진전의 첫발은 내디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장애활동가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또 그 노력과 함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협회를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많은 자정노력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할 인권의 방향들 특히 그런 것들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드러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생각들과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제도의 과제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의 김용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두번째 발제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계신 임성택 변호사님이십니다. 두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신 김정하 선생님이십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양천구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독관이시고 양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신 이상희 소장님이십니다. 네번째 토론자는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수석부회장님이시고 교남소망의 집 원장님이신 황규인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바로 김용득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반갑습니다. 약간의 긴장도 있는 것 같고 또 뭐라고 할까요, 기대도 있으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인권포럼 가끔씩 양 대표님 뵙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사회계에 핫이슈들이 많고 그 이슈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의 숙제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대립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인권포럼과 같은 뭐라고 할까. 하나의 참신한 조직이 장애인들의 민감한 이슈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시설문제, 하여간 매우 안타까운 얘기고. 국민적인 분노의 사안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연구 겸 현장방문 이런 걸 10년 가까이 해 오면서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정부 용역 과제들도 하고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신 분들이 탈시설 운동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애써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센터같이 장애 당사자 조직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거주시설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동일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여간 동의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요소들은 사실 공동으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 원고는 그냥 뭐를 발제할 것이냐 말씀하시면 딱 한마디로... 한마디가 아니라 두 줄로 썼습니다. 두 줄은 뭐라고 썼냐 하면 거주시설, 사람 사는 공간입니다. 이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공간하고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사건들을 나열을 한번 해 보면 인화원, 아마 사진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인강원, 그 다음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석암원. 하여간 10여 개 이상, 끝없이 많죠. 이 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들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은 건물의 모양이 학교처럼 생겼습니다. 좋게 말해서 학교지만 수용소처럼 생겼고 이미 공간의 모양이, 이 공간의 모양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은 학교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올라가면 교무실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왼쪽에 원장실 있고 그 왼쪽에 큰 식당이 있고 그 오른쪽에 무슨 치료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고 2층 가면 한 방에 8명씩 사는 숙소가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뀌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그러면 한국에는 그러면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이 없냐, 이런 얘기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 가면 엠마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가 9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나의 구에 있지만 위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에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채 중에 한 채는 사무실입니다. 그

래서 행정지원을 하는 그 사무실이 있고 다섯 분, 네 분의 33평 아파트에 직원 한 분과 발달장애인분들이 같이 사는 이런 형태. 그리고 또 이게 생긴 지가 한 3년쯤 될 겁니다. 또 최근에 저는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월평빌라.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는 빌라. 양측에 있는 4층짜리 집을 임대를 했거나 샀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가구단위로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긴 지 한 4년된 인천의 하늘채,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대비시켜놓고 볼 때 이 둘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 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령은 P&A시설, 한국형의 표준시설은 뭐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시설입소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 정말 좀,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의, 한 사람의 전용면적 3. 3제곱미터. 절묘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1평. 그리고 한 방에 기거할 수 있는 인원 성인 8명, 아동 10명. 그러면 3. 3 곱하기 8 공간에서, 여덟 사람의 발달장애 또는 장애인들이 그 직원 선생님 한 분하고 옷장 다 넣고 이불장 다 넣고 이렇게 사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 공간이 구조는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지시하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공간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우회적으로 푸는 방식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민하고 업체는 이런 활동이 가장 전제가 되고 이 이후에 그러면 프로그램상의 인권문제, 개인의 도덕성에서 개연하는 인권문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전형적인 시설의 형태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좀 달라진 조건으로 가보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조금 구체적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간략 간략하게 제가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분에 시작해서 지금 35분이니까 딱 10분, 벌써 10분을 사용 한 거죠, 그렇죠? 10분 남았죠? 그러면 제가 자료상으로 여러분들께 타이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문제 생길 때 마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 대응의 레퍼토리는 매우 다양하고 유행이 있었습니다. 평가제도에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꿨습니까? 못 바꿨죠? 무슨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하면 될 것이다, 바꿨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안 바꿨

죠? 또 회관 이사했죠? 달라졌습니까? 분위기는 변한 게 있겠죠,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니다. 본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인권센터 설치하고 인권으로 뭔가를 잡아낸다고 접근하는데 이걸 또 한마디로 쇼입니다, 제가 보기에 는.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이냐면 정부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부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 방식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탈시설이라고 하는 걸 화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시설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뭐 나라마다 발생시점과 발생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탈시설운동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탈시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시설에 사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지역사회에 사람이 이동하는, 이주하는 이걸 탈시설이다, 이게 전형적인 탈시설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시설이라는 단어, 개념으로서의 시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시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인화원, 인강원, 이런 시설들이 연상시키는 건 뭐냐하면 분리, 억압, 부당한 강요, 통제, 수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억압적이기 때문에 시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탈시설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자기의 원가정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장소도 시설적이 아니라 가정적인 걸로 바꾸면 이것 역시 탈시설이다, 그래서 탈시설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 원칙, 이걸 여러 가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주시설 서비스의 원칙이 장애서비스의 원칙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 원칙의 제기는 뭐냐하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자기 집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살던 자기 집, 비가 좀 새요. 오래됐죠,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살아도 내 집에서 사는 게 좋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최대한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시설이 불필요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떤 나라도 현실세계에서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시설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시설의 자릿수의 2.5배 내지 3배입니

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현실 대응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원칙, 이 원칙 하나고. 두번째는 시설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할 때 발상을 대표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헌법에 보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평등하다, 이게 아주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냐면 시설은 입소하는 순간 통제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실천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이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해행동이라고 하는데 자해행동을 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안전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해하는 타해행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유는 그 조건에서 제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의 공간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원칙은 자유다. 원칙은 제한 없는 자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예외는, 구체적인 비용이 존재할 때 예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칙 중에 또 한 가지는 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줘야 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프라이드 침해입니다. 내가 혼자서 잠자리 들 수 있고 혼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한테 잠자는 시간을 정해 주고 잠들 때 이것저것을 챙겨주는 것은, 챙겨준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프라이드 침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뭐라고 할까, 개인의 맞춤으로 접근하는 다양성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얘기인데요. 시간관계상 쪽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적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주공간,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국민최저 주거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이걸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민 최저 주거기준. 국민 최저 주거기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상에 기초한 주거기준입니다. 이거 맞추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 시설규모 너무 큼니다. 규모가 뭐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완전 다릅니다. 10명이 사는 공간과 100명이 사는 공간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말 저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에 보면 규모가 최근에 확 줄었는데. 확 줄지 않았습니

다. 그룹홈이라고 하는 시설로 잡으면서 평균이 줄었을 뿐이지 대형화,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표3 보시면 무연고 입소 비율이라는 게 정부, 중앙정부 100세에 버젓이 나옵니다. 정말 느끼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죠. 우리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연고자의 비율이 어떤 곳은 50% 정도 되고 30% 되고 20%도 되고, 이 사람들이 실제 무연고자냐? 아닙니다. 버려지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버려지느냐, 어느 가정에서 같이 지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수급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이른바 가족간의 인연을 끊는 이런 눈물겨운 방식이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이걸 중앙정부의 통계연구에 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표7 보시면 이 표7 별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 우리 지금 우리 스스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선진국이라고 이름붙이는 게 주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영국의 캠프힐 라샤공동체, 10명이 사는 집, 일본의 1인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의 요지는 뭐냐하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회를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큰 분류로 보면 캠프힐 라샤와 같은 공동체의 시설, 그다음에 케어공간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주서비스형 시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숙들 해 보셨을 텐데 하숙집처럼 운영되는 그런 가정형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관여없이 주택 임대하는 프로그램.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맞춤형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이런 숙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딱 3분만. 그래서 몇 가지만 원고의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도들 중에서 소규모화하고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 중에서 시설의 공유지향 그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번째는 우리 현재는 재정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대형시설일수록 운영하기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게 뭐냐하면 규모의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인, 30인 운영하는 곳들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300인을 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운영할 만합니다. 어렵다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설계는 대형화하세요. 소규모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완전 넌센스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도 저는 이제 좀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외존도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이 사람에 대한 비용이 이 시설에 가고, 이 사람이 이리로 가면 재정시스템도 이렇게 재정 시스템도 개인 시스템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정시스템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설이 삶의 공간, 자유로운 공간이 되려면 진입장벽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한 달 살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자, 무연고자, 이용제한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비입소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비입소제도는 아주 낙후된 제도입니다. 이게 정액, 모든 소득계층에게 정액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상위 계층쯤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국가가 해 줄 거면 소득에 비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하여간 이게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 서비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감독은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위해서 최근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법이 있는데 이 품질관리법은 전문인스펙트들을 고용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권한을 갖는, 이런 모양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법률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 구조.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철저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김용득 교수님 발제를 얼마큼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신 말씀은 시설문제의 가장 근본 본질은 시설표준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인권대책이라는 것도 주로 그 공간 자체는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감시하는 기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운영위원회라든가 공익이사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발제를 들으면서 최근에 하나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용득 교수님 원고 중에 시설유형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게 실제 어떤 측면에

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된 것 중에 몇 분이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실 데를 알아보는 일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이리저리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공동생활 가족이나 소규모 시설들은 이분이 지적장애와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올라오면 우리 시설의 안정이 깨진다, 이런 말씀들로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런 소규모 시설들 중에서도 케어의 수준이 높은 시설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제 이분들을 받아주는 시설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현재 가장 많이 옮겨간 시설은 사실은 노숙시설로 옮겨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받아줄 데는 현재로는 노숙시설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삼호 위원님 발제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삼호입니다. 제 발제는 3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시설에서 인권유린, 부정과 부패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토론회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에서 나왔지만 서울은 최근에만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석암재단이라든가 성람재단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2012년만 하더라도 김포 소재, 서울시 관리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터져나와서 그때 이미 2012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만 비리가 발생하면 폐쇄조치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이런 제도도 있고 인권지킴이다, 이때부터 설치가 되었고. 또 서울시의 시설생활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코너 같은 것도 만들고 종사자들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등등의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와중에 또 인강재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73년도에는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주거면적이라든가 개인적 자유의 보장 이런 관련된 세세한 조항들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치가 없는 게 아니고 조치가 계속 있어왔는데도 인강재단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시설 법령을 형평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득 교수님께서서는 주로 거주시설의 어떤 변화, 유형을 다양화하는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설이라는 게 존재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아니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설에

서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면 시설이 존립해도 되는가. 저는 그렇게 하면 시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그런 게 결론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당장 있기 때문에 탈시설을 해체하거나 폐지시키는가. 저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탈시설 프로그램이 명확한 탈시설 프로그램과 시당국이나 정부 당국의 의지, 플랜 같은 것을 발표하고 실제로 탈시설 프로세스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탈시설을 하더라도 거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수용할 만한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김용득 교수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일부 소개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주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폐쇄해 버리니까 어떤 연구자료에서 봤는데 그 지역의 노숙자가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이 일방적으로 탈시설화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탈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장기플랜은 지금 저는 빨리 서둘러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함께 탈시설화를 실제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잠깐 보니까 40쪽에 통계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수와 거주자들의 수가 점진적이긴 하지만 계속 증가한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생활시설이 많아지고 지체장애인의 수는 줄어든다, 그것은 70% 정도가 이미 발달장애인이고 생활시설에서 거주자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적응능력 같은 게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몸에 상처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증언으로는 당사자가 당했던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발달장애인 문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우리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분석한 장애인 관련 예산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의 40.7%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을 다 포함하는 시설인데. 장애인 예산의 40% 정도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예산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전국 평균이 38.4% 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시설을 유지하고 운

영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도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역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예산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가 생활시설 이용자 1인당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286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증장애인이 서울시 소재 시설에 갔을 때 서울시민이 그 한 분을 위해서 연간 2860만원을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국 평균이 생활시설 1인당 예산이 전국 평균이 연간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서비스 1인당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600만원 정도 초과하는 거죠. 굉장히 시설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사실상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강재단 사태 같은 경우의 인권침해를 보니까 장애인을 폭행해서 뼈를 골절시키고 샤워용 수건 같은 것을 장애인 손을 묶어서 구타를 하고 이사장의 인척이 직원으로 있고 원장이 자신의 고가 옷을 생활인들 옷을 산 것처럼 꾸며서 자기 옷 사고 해외 여행 가고 이런 등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아주 고전적인 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 관계관 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그 자료에도 보면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여러 가지 시설의 인권유린 사례를 지시를 해 봤는데 그 대부분이 인강재단에서 일어났던 유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세트가 있는 거죠. 폭행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자들의 돈, 또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실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후원금조로 돈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설의 자체 프로그램에 올린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아주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대와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이 저는 한국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고전적 형태의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시설을 보면 대부분 대형시설이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관청에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시설비리는 한 건도 없다. 대부분 시설생활인들의 외부로의 제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들, 양심적인 직원들의 제보라든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설의 문제가 드러나지 실제로 그 시설에 예산을 주는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시설의 비리는 지금까지 없었다. 물론 실태조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일부 하게 되면 몇 건 밝혀지는데 통상 대형의 사건을 밝히는 경우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제 경험으로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말하는

고전적 형태의 시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기를 발달장애와 약물과 촉탁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제기입니다. 이걸 사실 문혀 있는 인권쟁점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주에 있는 시설에서 14살 먹은 발달장애 어린이가 입소한 지 3년 만에 죽었는데 사인이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이걸 간호 프로파일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이 어린이의 사인이 약물중독자라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약물중독이라고 의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약물부작용, 거의 확실히 확인이 되었고 이것은 그해 5월 8일날, 2008년도 5월 6일날 PD수첩에서 재호는 왜 죽었을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직접 제가 같이 하면서 박재호 군이라는 아이였지만 이런 사건 외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 시설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시설의 시스템으로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폭행 아니면 거의 약물, 이게 아니면 실제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쪽에서도 폭행은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고 증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쉬운 약물 투하, 약물이라고 말하는 건 정신과 의약품 이야기합니다. 신경안정제, 강력한 할돌 같은 거, 아티반 같은, 이런 혼한 신경안정제를 통해서 자폐성 장애 어린이들을 시설에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사례는 특수학교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시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반 아이가 장기결석을 하길래 시설에 연락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임이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10살 먹은 아이가 배가 아파서 시설에 갔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냐면 그 시설에 촉탁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26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내과진료를 받는, 그런데 그 병원이 시설 인근에 있느냐, 다른 타 시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은 경기도에 있는데 정신병원은 부산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26일 동안 배가 아픈 10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진료를 받았고 이 담임도 정신병동 안에 들어가봤고 나도 그 이후에 정신병동 안으로 직접 가봤는데 거기엔 아이는 한 명도 없고 다 성인이 정신장애인들이 거기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10살 먹은 아이가 26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내과진료를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저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례는 작년에 제가 지금 내부제보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시설

에도 역시 촉탁의사가 정신과의사인데 이 사람이 다른 타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은 경북에 있고 정신병원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촉탁의사가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월급은 24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후원금 처리가 되더라. 그것이 원장한테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이 원장은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정신병원에 매달 아이들 5명씩, 생활인들, 특히 아이를 5명씩 약 1개월 정도 입원시켰다가 온다라고 들은 제보가 있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정원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어렵죠. 인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있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고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발달장애인 같이,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 어린이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통제하는 것은 이걸 합법적이에요. 거의 합법적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촉탁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적인 문제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사실 촉탁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촉탁의사한테 지불하는 국민 세금이 얼마나 하면 553개의 생활실 내에 한 명씩 다 의무적으로 촉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촉탁의사의 최저 기본급이 월 244만원이죠. 이걸 곱해 보면 연간 160억 정도를 국가에서 촉탁의사에게만 예산을 지급합니다. 저는 촉탁의사가 특정한 민간 정신병원의 의사라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병원의 영업을 위해서, 물론 의사의 양심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병원의 영업을 위해서 과도하게 생활인들을 자기쪽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생활인들의 삶,행동 같은 걸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돈도 많이 벌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촉탁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또 진짜 존경할 만한 촉탁의사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수 시설에서는 이 촉탁의사들이 단순하게 병원의 영업 차원에서 촉탁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촉탁의사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촉탁의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그 동네에 보건소는 아주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군 지역에 가면 제일 큰 건물이 군청하고 보건소예요. 그러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촉탁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를 적어도 공공의료시스템 안에 넣어야 되지 민간 촉탁의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국가가 돈까지 쥐가면서 촉탁 의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중생활시설 내에 장애인들의 건강은 공중의료시스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걸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용득 교수님께서 생활 시설 내에 진입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성인 장애인들, 성인장애인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가면 못 돌아와서 못 나가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18세 미만 장애인들은 이게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전체 22만 6000명 중에. 18세 미만 장애 어린이들은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가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더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임시적으로 들어가고 이 아이들은 무조건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건이 안 되면 이 아이가 18세 미만 어린이 한 명이 서울 소재 생활시설에 들어가면 서울시는 28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이게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연간. 그 절반의 돈만 가지고 그 아이의 가정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설에, 어린이들의 시설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3년 전에 건강복지 실장님하고 있는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아직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법률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150만원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 어린이 부모가 양육비로 받았을 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법적인 문제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18세 미만 어린이만이라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 가정도 있습니다. 위탁가정이 지역별로 2명 정도 있어요. 장애 아동을 위탁해서 키우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줍니다. 지자체에서, 그 가정에. 그리고 의료비를 별도로 연간 20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 위탁가정에 시설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만 줘도 저는 위탁가정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8세 미만 장애 어린 아이를 시설에서 케어하는 것은 이걸 반문명적입니다. 반인권적인 걸 떠나서 저는 반문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18세 미만 장애 어린이들이 그때부터 시설에서 10년, 20년 자라면 성인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장애인을 탈시설화하는 데는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시설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탈시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 아동조약이라든가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 등

모든 협약과 국내법에 의해서 어린이는 가정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조항 같은 걸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10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행정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근본적으로 시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규모의 다수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대안주거나 소규모 가정형태의 시설로 전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구요. 그다음에 시급한 여러 가지 시설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시급한 과제로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생활시설 입소 금지, 그다음에 두번째는 실제 이런 공론의 장에서는 처음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물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 친구 중에 정신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들이 하도 정신과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야, 네가 한번 먹어봐 그랬다가 진짜 한번 먹었다가 3일 동안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적정량 이상의 약물을 처방해서. 아까 PD수첩에 나온 사례 같은 경우 실제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로 재호는 왜 죽었을까 하는 2008년에 MBC에서 방송됐던 것 같은데. 심각한 약물부작용이 의료진이 항상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러면 토론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택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시오.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성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방송했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꽤 많이 보셨네요. 몇 년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났었죠? 1987년입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거지를 길거리에서 없애라, 전두환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부랑시설이 다소 만들어졌고 그중의 하나인데요. 도가니 사건은 몇 년도에 일어났죠? 2005년도인가 그때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시설 인권문제, 이런 토론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한 5년쯤 하다 보면 더 이상 시설인권 이런 얘기 안 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인강원 사건 등 끊임이 없습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시설에서의 끔찍한 인권침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김용득 교수님 제가 발제문을 보니까 63%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10년 이상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당 이용자 수는 2012년은 줄었는데 이게 그룹홈이 통계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서 실은 그룹홈 이런 것을 제외하면 50명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방에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방에 5명이서 한 집에 50명이서 10년 동안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천사 같은 시설장과 천사 같은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5명이 한 방에서, 50명이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라고 하면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프라이버시도 있고 집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네 극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탈시설 소송이라는 걸 했습니다. 꽃동네에 살고 있는 2명의 원고가, 2명의 장애인 원고가 나는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겠다라는 청구를 했고요. 그것이 거부됐습니다.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 원고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편지의 제목이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당당한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편지의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인권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호의 개체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로 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시설인권, 시설인권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설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아무리 무슨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시설 폐쇄하고 그런 주장을 저도 과거에 여러 번 많이 했는데요. 물론 종식의 진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탈시설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5명 이상 한 방에서 10년 동안 50명 이상 되는 시설에서 살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탈시설만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의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리옹호 시스템입니다. 시설인권 문제를 해결방법의 하나로 권리옹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1972년인가요? 윌로우 브룩이라는 시설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욕주의 대규모 시설이었던 윌로우 브룩에서 아주 끔찍한 인권침해,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미국에서는 P&A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도가니 영화가 한창 많은 사람의 관심을 거두었을 때, 물론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한 일은 공익이사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도입한 것이 감시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에서 윌로우 브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든 권리옹호시스템이 가져온 과정을 지켜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옹호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P&A라고 합니다마는... 번역하면 보호와 옹호입니다. 전국의 각 주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냐면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장애인 인권활동가들, 상담사들, 전문가들, 장애인 전문가들, 무엇보다도 장애인쪽 일을 오래 해 온 변호사들이 모여서 장애인의 인권옹호, 권리옹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료를 하나 출력해 가지고 왔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료는 캘리포니아주 P&A에서 매년 발간한 보고서 중에 2012년 보고서입니다. P&A는 한마디로 시설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P&A는 장애인이 이런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도와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 터졌을 때 여러분, 영화 보시면 여주인공이 어떤 인권단체 활동가로 나오죠. 그 친구가 인화원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제보를 듣고 도와주면서 사건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모든 시설 인권침해사건에서는 어김없이 장애인단체들이 등장합니다. 원주 사랑의 집 사건에서도 그랬는데. NGO,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SBS랑 같이 시설을 찾아갔었는데 이 시설 안에는 끔찍하게도 많은 장애인들이 격리되어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권한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에서. 나중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들어간 데 대해서. 그래서 P&A가 필요합니다. 시설인권 침해사건에 접근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소송도 제기하고 권리옹호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P&A, 매뉴얼리포트를 보니까 여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블로 케이스라고 파블로라는 어느 근육 장애인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활동보조, 치료, 요양,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당신은 성인이 됐으니 더이상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주정부에서 서비스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P&A가 소송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전히 집에서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P&A의 1년 예산은 2000만불입니다. 200억이죠. 연방정부에서 900만불을 제공하고요. 1년에 90억, 주정부에서 65억을 제공합니다. 기타 등등 이러한 수입이 있어서 2000만불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자기네들 자랑을 맨마지막에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장

애인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 2만 3000건의 사건을 2012년에 자기네들이 해결했고 자기네들이 한 장애인 권리옹호 소송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장애인이 58만명 정도. 그런 등등의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변호사가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P&A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서울시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생겼고요. 경기도에도 생겼고 성남시에도 생겼고. 전라남도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런 인권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법률로써 이런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권리옹호 시스템은 이런 시설에 대한 접근권, 조사권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정당이나 혹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이런 P&A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시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을 권리주체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시설 인권에 관한 세미나에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말미에 본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변화와 함께 권리옹호 시스템으로써 미국과 같은 P&A 같은 이런 제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하 상임활동가님입니다.

○김정하(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의 김정하입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처럼 이런 자리가 지켜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성람사건 할 때도 몇 년간 싸웠고 석암재단 문제도 몇 년간 싸웠고 인강재단 터지니까 대책위 구성해서 인생이 편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혹시 제가 지금 떨고 있나요? 아닌가요?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강원 원장님이 와 계셔가지고. 솔직하게 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좀 걸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인강원 원장님께서서는 저하고 악연이 좀 깊으셔가지고. 악연인지 인연인지. 왜냐하면 제가 석암재단 비리 문제로 몇 년을 싸워야 했을 때에 서울시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셨고 석암재단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

는 최고 실권자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석암재단 문제로 과장님하고 악연이 좀 있었는데. 인강재단에 이번에는 원장님과 대책위 사람으로서 만나야 되는 인연이 있어서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시는 것은 아마 잘 배우고 들을 얘기 들으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저를 명예훼손을 걸거나 그러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론회 기획이 됐을 때 저보고 인강재단 얘기를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와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용과 제가 말하는 것은 대책위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바닥 활동하면서 제가 그동안 시설비리와 싸우고 탈시설 운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태교에 안 좋게 열라 싸우느라고 약간 열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강재단이 3월 12일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3월 24일날 서울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에 항의성 면담을 했죠. 인강재단 사태가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거주인들, 지적장애를 주로 갖고 계신 분들께서 피해자 진술한 이후에 2차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2차피해라 함은 지적장애인을 다시 협박해서 그런 거 진술한 건 다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회유를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직원들도 회유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책임자, 가해자 또 그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리규칙이나 보호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 지 한 달 사이에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인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장님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사택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전 인강원의 원장이었던 엄마, 이사장의 엄마, 부원장인 이사장의 이모. 그러면서 가해자이죠. 쇠자, 고무장갑 끼고 쇠자로 때렸다고, 인권위 보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시설에 드나들고 사택에 드나들면서 그 거주인들을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이의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지나는 동안 뽀족한 수 없이 이게 여기까지 왔고 어제 도봉구청 팀장이 현장 파견근무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인강원... 인강원장님이 서운한 것은 장애복지 과장님이셨으니까 시설에서 어떤 식으로 비리양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아셨을 텐데 인강원의 원장님으로 있으시면 2차 피해를 최소한 막아주고 비리 관련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 바람은 너무 오버였나 봅니다.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진, 제가 기대하는, 희망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늘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는데 그 검찰조사 보통 그런 거 하면 그 장애인을 잘 아는 생활보조, 이런 사람 위주로 하거나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검찰조사 가는데 원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시설에 근무해 오신 시설과 굉장히 결탁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무국장과 그리고 그 비슷한 직원들이 5명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차를 타고 검찰청으로 이동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울시하고 도봉구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진술할 때는 같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동시설에서 무슨 폭행을 당해서 그 사람한테 진술을 받을 때 바깥에 너 그 말 하지 마라고 협박한 사람이 문 바깥에 있는데 문 안에서 그걸 진술하라고 얘기를 하면 위축돼서 말 못 하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술방에는 같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저는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2차피해를 막으려고 가 있던 어제부터 파견돼 있는 도봉구청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은 뭘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항의했더니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 열을 내고 수십통화를 했더니 아직도 열이 안 가라앉혀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비리나 인권문제 이런 걸 너무 수없이 해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뀌는 건 없고 그런 비리 집단들의 태도는 똑같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강재단 이 비리가 3월 12일날 발표가 됐을 때 내가 인강재단 이사장이면, 내가 그 사람이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인강재단 거주인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주인 부모들, 보호자들 회의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용을 부풀린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보호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복지에서. 너무 저도 장애인 단체에, 어쨌든 복지죠. 복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말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인강재단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비리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도가니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저도 각종 대책위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똑같아요. 비리와 인권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이 일어났고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는 1명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고. 왜냐하면 다수의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수한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년간 바뀌지 않았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이 세습된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법인 중에 큰 법인들 대부분 세습돼요. 성람재단도 그렇고. 성람재단의 경우는 조 씨일가인데 횡령내용 중에 이 아버지가 유

학자금으로 장애인들의 중식비, 이런 게 미국에 유학자금 보내줬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 누구였냐. 조 씨의 큰아들 조 씨였어요. 조 씨의 큰아들 조 씨는 뭘 전공했느냐.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럼 지금 뭐하냐. 성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석암재단은 그 문제가 몇 년을 싸워가지고 해결이 돼 가서 이사진들이 다 바뀌어서 그나마 이 씨 일가를 어쨌든 현장에서는 조금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물러났고요. 지금 인강재단에서도 구 씨로부터 구 씨의 둘째아들인 구씨가 맡고 있고 구 씨의 어머니, 구 씨 이모 이런 사람이 개입해서 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구 씨의 형인 구 씨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구 씨 일가가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정부의 무능력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부는 맨날 지방책임이라고 하고 시설관리는. 서울시는 감사원 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맡기 시작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뒷수습 하면서 아니 왜 이 문제, 예를 들어 인강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이 구 씨의 어머니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원장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봉구청에서 이 사람이 원장 자격이 없다고 해서 원장으로 인정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줬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도봉구청의 변명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성폭력 사범만 보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이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안 봤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만 봤는데 거기에는 성폭력 사범만 걸리더라,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그다음 핑계를 댄 건 그건 원래 구 씨의 어머니, 이 씨께서 본적지가 종로구청인가 봐요. 종로구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종로구청에서 문제없다 그랬다.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다른 구청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늘 이런 식이죠. 뒷수습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자기 직원들의 책임과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석암재단도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종로구청을 찾아갔어요. 종로구청에다가 이런 문제를 제보했더니 종로구청이 하는 말이 노조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짓이다, 이렇게 묵살했거든요. 인강재단건도 도봉구청과 도봉구청실을 처음 찾아가서 문제를 호소했는데 그쪽도 다 묵살당해서 인권위에 진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제보자 얘기를. 어쨌든 이렇게 지역사회의 유착을 우리가, 저는 명확한 증거를 뭐랄까요? 심증적인 증거는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유착했다, 이런 물증 잡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유관단체가. 사실 물증 없습니다. 물증 없는데 그런 걸 의심하게끔

하는 많은 상황들이 항상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 유착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봉구의 모 기관장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구 씨 어머니 이 씨께서 굉장히 부자셔 가지고 구청 담당자들 여름이면 보신탕 사주고 항상 구청장 대접하고 그래왔다고 몇 년간. 자기는 몇 년간 그걸 봤다고. 자기도 초대받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일상다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나쁜 상상도 해 봅니다. 사법기관도 한계가 있는데요. 성람재단도 처음 기소했을 때 검찰에서 계속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람재단이 힘이 세서 검찰을 움직이는구나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성람재단 조 씨의 부인이 세탁실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가짜 인건비로 횡령해 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환수명령을 했는데 고발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도 안 했고. 그걸 다 얘기했는데. 보통은 그런 횡령사건은 고발하는 게 맞는 건데 돈은 다 걸렸으니까 인건비, 이런 게 다 걸렸으니까 환수는 하는데 죄는 묻지 않는. 자기들끼리 잘 봐주는 그런 거 있죠. 되게 안타까웠던 일이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성폭력사건이 2년 뒤에 또 터지니까 그전에 사람이 맞아죽은 사건도 있었고 별별 사건이 다 있다가 하나도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다가 성폭력 사건이 터져서 그제서야 했거든요. 그 전에 검찰이 개입했다면 그런 성폭력 사건 안 터지죠.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비리수사로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사법기관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달라진 분들도 있지만 인강재단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등장하는 문장.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해서 감형의 요인이 되죠. 사회복지일을 했다는... 일종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로 돈을 횡령하고 사회복지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감형을 해 준다는 것. 판결문에 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판사님들께서 이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수준이 낮으신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걸 활용해서 정말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 벌이를 했는데 그리고 학대했는데, 학대를 방치했는데, 그 사회복지로 감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는데 마포구청이 아무것도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시설장은 다른 시설로 옮기고 거주인도 다른 데로 옮기고. 경기도로 옮겨 가지고 시설 다시 만들어서 거주지를 옮기고 있거든요. 서

올시는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마포구가 그걸 잡고 폐쇄명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시설들 거주인들 다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익제보자도 보호가 안 돼서 오히려 공익제보 한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로 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양심만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사까지 내버려야 이런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환경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이런 문제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인권지킴이단, 다 아시겠지만 내부자로 구성되어 있고 상급자가 침해를 저질렀는데 하급자가 이 사람 조사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단이 너무 효과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인권지킴이단이 마치 대안인 듯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죄송하지만 1분 정도로 정리 좀 해 주시면...

○김정하(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감독관은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시설장이나 사무부장이 감독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은 모르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조사대상 시설인 사람의 운영자들이 인권감독관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3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결과 발표하는 거.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협의회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시설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 법인장들이 모인 협의체예요. 거기에서 시설평가를 해요. 그걸 국가가 돈을 주고. 그걸 정부의 공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평가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네 시설 평가하는 것도 보고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외국처럼. 인강원 치면 시설평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복지부 사이트에 가서 시설평가 다 검색해야지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재단에 들어가서 인강원의 거주면적, 거주인 현황 이런 것들, 시설평가를 평소에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보고서를 다 찾아내야지 시설평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 주체가 누구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백화점 평가를 하는데 백화점들 모임 협의회 이런 데다가 정부가 돈을 주고 백화점을 평가하세요, 백화점들끼리.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국에 장애인 시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91개인지 2개인지. 2개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엉망이에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설종사자가 예를 들어 꽃동네 직원이 조사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뿐만 아니라 정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모집해서 조사하거든요. 이런 조사가 과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딱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죠, 복지부가. 뭐 있어보이잖아요. 대통령이 한 마디, 인강원 문제 딱 터지니까 대통령이 딱 한마디하고 바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실상 또 까보면 거기 안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런 졸속행정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법이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법인데. 아까 말했던 시설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전 복지부 장관님이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도가니 터져서 개혁하려고 할 때 나와서 사회복지사업법 집회를 하고 대회를 열고 의원들 로비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들이 주로 인권침해나 사회복지 법인이 잘못됐을 때 규제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사회복지협의회고 그 사람들이 결국 시설평거나 이런 것들도 정부 돈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그런 쪽에서 사실 정내미가 떨어져서 내부를 바꾸고 그 사람들 개혁시키고 이런 것에는 사실 정내미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시설이 과연 내 집과 같은 공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뭐냐면 지금의 한국사회는 너무 보급자 위주잖아요. 이 불균형이 깨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자가 그래도 예를 들어 사회적 규제가 아주 강화돼서 뭔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면 권력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한 학급에서 권력관계가 있듯이. 거주인간의 권력 관계도 있고요. 계속 그 권력관계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주시설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산다는 것이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도 마찬가지로 그룹홈도 저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주시설을 아까 거주시설 내에 프라이버시 강화 인권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문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어요. 저는 물론 당장에 벌어지는 인권침해 때문에 정말 눈이 뒤집히고 가슴이 뛰고 답답하지만 계속 이

런 식이었거든요. 10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거주시설 문제 있으니까 거기 에다 좀 더 뭘 추가하면 환경적 개선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어도 십 몇 년을 이쪽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저는 거기 정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탈시설, 자립생활 위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균형점을 완전히 바꿔놓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주시설 면적 좀 넓어지고 밥값 좀 올라가고 그걸로 뭐 바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투자가 이제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으로 가고 그런 것 속에서 이게 확 소비자라는 표현을 하면 이런 장애인들의 거주욕구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확 재편돼야지 지금처럼 있는 시설 어떻게 해요.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어떻게 해요. 이 똑같은 논리로 몇 십년 동안 울궤먹어온 시설운영자들도 똑같은 논리로 울궤먹었던 그런 논리로 하면 변화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십여 년 넘게 했던 것의 저의 결과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투자가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의 74%, 이런 것 속에서 간단치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김용득 교수님께서 외국에서도 시설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저는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이걸 전환, 딱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파워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2017년까지 600명을 탈시설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2013년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사실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탈시설 공동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2014년에는 민간단체가 완전히 개입해서 100명이라도 자립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어느 시설과 계속 얘기해서 100명을 목표로 자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의 노력은 진짜 민간단체의 노력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방점은 언제 찍어야 되는지, 뭘 중심으로 재편해야 되는지, 뭐가 중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가린 눈을 열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도 인강대책 기자회견이 도봉구청 앞에서 있어요. 다음 주에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있고요. 계속 대책위 활동이 진행되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메일이나 홍보문을 보시고 같이 참여하고 다니는 이런 재단이 사회복지 하는 데 열심도 못 하도록 하는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원장님도 그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열심히 활동하시는 과정에서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 활동하는 동안에 경험

한 시설들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사법 기관, 국가인권위 이런 기관들의 한계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차피 조금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상희 소장님께 토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양천구장애인거주시설인권감독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상희입니다. 저도 이 자리가 불편한데요. 도봉구청 앞에서 집회... 저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토론자 중에서 탈시설의 당사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대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실제 당사자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실제로 인권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설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의문이 드는 것은 시설과 인권이 어울리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설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반인권적이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 필요한지, 하지만 이번처럼 인강 같은 사태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나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죠. 도가니 사태 이후에 전국적인 시설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감독관으로 향의를 하게 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었죠. 그 기회로 지역에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진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처음 경험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첫째 그걸 진행하는 주체가 어디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구청의 담당팀에서 그 방안을 진행을 하죠.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공무원이 본인 시설을 조사한다. 그럼 그 안에서 어느 누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조사에 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을 했고 인권관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서 구청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권고한 것이 시설명령을 권고했고 실제로 경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도 하고 다 했지만 결론은 증거부족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자체 수사 종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권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신체장애인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인권인권조사위원회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행위가 드러나야만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활동이 거의 4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된 결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설폐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설폐쇄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인권 시설은 그 시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만나는 당사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시설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서 당사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고 외출도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시설 안에서 그냥 아침에 눈떠서 주는 밥 먹고 누워 있다가 TV 보다가 바닥 기어다니시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무시는 거죠. 그런 실상에서 아무리 인권을 얘기해 본들, 당사자들의 인권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권적인 삶은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를 나열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의 구조가 점점 어떻게 보면 시설제도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에 필요한 자치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을 요하는 시설의 정책이 어찌보면 지역사회로 더 뿌리 깊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시설에서 탈시설을 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탈시설화라는 것은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유일한 당사자들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시설을 폐쇄하고 환경적인 것도 케어하겠죠. 하지만 지역사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진, 희망을 가진 분들이 당사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자 한 분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시설 안의 인권문제를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바로 황규인 부회장님, 마지막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수석부회장, 교남 소망의집 원장):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사실 인권토론회에서 토론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이 자리처럼 시설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즐기게 그런 비판들이 이어져 왔고 한편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거의 천덕꾸러기 사회속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지 꽤 오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었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시설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고여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또 촉진적인 요소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게 제의하시는 분께 그러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실천해 온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그 나름대로의 내용을 중심을 잡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생겨납니다. 사실 저는 탈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인권,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사실 긴 시간 고민했어도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들을 한 30여 년 동안 생활상을 지켜보면서 필요, 아동기부터 쪽 자라나는 과정에서 필요가 공감됐고 그러한 공감할 것들을 작으나마 실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아니다 싶은 것들도 물론 깨우쳐질 때마다 개선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 과정에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김용득 교수님의 연구와 또 그런 제언들이 저희에게 안내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서가 되었다 해서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현실과 너무 멀어서 화도 나고 또 한편에서는 질책을 하는 것 같아서 따갑기도 했죠. 그런데 거의 한 10년이 지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조금이나마 작은 시도들을 했을 때 뭔가 그 실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04년부터 인권을 알고 인권을 고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성장한 후에 39만원 보급을 받아오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노동의 대가 그리고 장애인의 재산을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변호사들을 만나려고 했던 노력이 여명국 변호사님을 만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

장 규정을 만들고 또 규정만 있으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해서 어쨌든 미력하나마 그런... 죄송합니다. 미력하나마 그런 실천들을 쌓아오고 있었고 동시에 99년, 2000년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이념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시설 이념을 실천한다기보다 시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삶의 방식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한 62%가 17채, 16채 제가 집이 많아서 세지도 못하네요. 한 16채 정도 되는 데서 흩어져서 저희가 살고 있고 100명 살던 집이 28명 남고 다 지역으로 이주하다 보니 밖에 나와서 사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 아직 가칭이지만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고 지금 실천의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이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한들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여건에서 시설에서 인권을 실천하면서 인권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주시설의 인권실천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상황을 놓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다가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거주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수용시설에서 생활시설, 거주시설, 용어를 바꾸면서 계속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변화를 강조했죠. 그런데 여전히 용어만 바뀌었을 뿐 지원책이라든가 밖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은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시한 통계에는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의 74.5%다.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죠. 발달장애라 하면 대부분 단순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를 동반했거나 언어장애, 때로는 지체, 청각 여러 가지 심리정서 특성상 이렇게 공격성이 있는 장애인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들의 실상을 보면 사실 32년간 장애인 복지가 발전했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좀 나열한 것을 보면 고용에서도 장차법에서도, 또는 당사자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또 자립생활에서 늘 그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탈시설화에도 시설의 74.5%의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제시나 그 부분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현재에 땅을 딛고 사는 장애인들의 형편에서 제시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늘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거주시설의 열악성, 이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자료 안에 넣었고요. 3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름대로 실천했던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이용자,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런 규정들을 문서화하고 조직한 사회. 서울의 시설 그리고 양산의 시설 그리고 부산의 사례, 이것만이 아니라 또 여느 시설들이 제안한 다양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 또 유형들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어쨌든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나 또 감독, 좋은 의미에서 감독이지만 때로는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데에는 늘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장애인 개인에게 뭔가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통해서 뭔가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김용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공간 내지는 설비, 직원의 구성 이런 부분도 인권실천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인권 관점에서 공간을 어떻게 변화하고 단순한 최소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건물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예 지역사회로 이주한 사례죠. 전략과 결과에 대해서 서울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경영보고서 인가요? 거기에 제가 성공한 사회복지시설. 이 3권에 보면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쯤 되니까 기관의 운영자들의 책임성 이 부분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는 잘한다고 하나 인권 관점에서 다시 비추어봤을 때는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물론 있어서 오늘 앞의 사례들이 나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보다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인권 관점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앞에서 이미 사회적인 큰 틀을 미래에 지향해야 되는 큰 틀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 인권 실천을 끊임없이 해 왔던 한 시설의 사례의 결과 제언이 또 대비, 제시되는데 102페이지에 제시를 했는데 그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인권 실천을 한 예가 없다 보니 그리 잘한 것은 아니나 그래도 사례로 등장을 했고 이것을 김미옥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직접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도 면담을 하고 원장도 면담하고 직원도 면담을 하고 이래서 이런 거주시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도 있어서 제가 102페이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시설 환경을 딛고 실행하는 것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개

선하거나 촉진적인 요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 촬영해서 어떤 서비스를 계획할 때 자료를 얻고자 하나 사실은 그런 한계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또 하나 넘어야 될 벽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권리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어려운데 인지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추상적인 권리를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참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연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발달장애인에 담겨 있는 장애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공격성, 자해, 타해, 기물파손, 이런 것들을 안고 있어서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한데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거주시설 안에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실천의 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인권실천의 대면적인 상황에서만을 말하지 않겠죠. 법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 시설물, 인력배치,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권실천을 통해서 거주시설에 장애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쨌든 알고 있는 것. 우리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서비스나 우리 직원이나 또 운영자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면적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항도 폐기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권침해하는 요소들도 과감하게 폐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방안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성년후견법이 제정이 되어서 인권실천의 또 하나의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나 했는데 아직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어떤 과제를 주기보다 그 일을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이런 부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전에 김용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 쓰는 것, 이게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거의 지각변동 수준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각에서 시설을 보았을 때 너무 낙후된 과거의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죠. 거기다가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말 견잡을 수 없는 회오리 속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그 부분을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면서 그곳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면한 거주시설 안에 고여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렇게 다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정부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상 그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또 한층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안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또 한 시대의 현실에 작동이 되어서 인권의 관점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또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해 오시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했던 노력,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실제 인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과 관련된 내부적인 어려움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4시까지로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이미 한 17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운영을 해도... 4시 반 정도에 정리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순서는 토론자 분들의 토론과 관련해서 발제자 두 분이 일단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먼저 기초발제 김용득 교수님부터.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삼호 선생님 발표 중에 아동의 경우에는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 이 철학을 법령화시킨 국가들이 세계 나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법령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2800의 절반으로 가능하다. 이건 사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절반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이걸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성택 변호사님하고 황규인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인권 견제는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 내부에서 인권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데는 효력이 없고 잘 되는 데는 이미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은 솔직히 외부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저는 오히려 사실은 내부에서 같이 사는 공간은 인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하 선생님하고 이상희 소장님하고 하신 말씀의 핵심을 보면 권력관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소규모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세계에서 이를테면 새로 생기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채, 엠마하우스의 집, 월평빌라,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냐는 문제인데. 권력관계가 여기를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권력관계도 여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권력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바꾼다는 말이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면 이 돈의 흐름 가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방법의 예를 들면 맨 첫번째 대규모가 유리한 재정지원 방식?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럼 소규모화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방식,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면 돈이 그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권이 하나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퇴소를 자유롭게 풀면,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하루든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권력구조는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지금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 제도의 기반은 거의 다 바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 엠마의 집 같은 것은 현행 법률에 기초하면 입법시켜야 합니다. 현행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인당 삼점 몇 평이고 정원이 1인당 21. 몇 미터제곱이 있어야 되고 사는 공간은 3. 3m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나머지 이십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시설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세탁실 따로 있어야 되고 조리실 따로 있어야 되고 세탁실 채광이 되어야 되고. 하여간 이렇게 대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광주 엠마하우스의 집은 지금이라도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폐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변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저는 일일이 토론자분들의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기보다 시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바뀌면서 통계를 잘 잡지를... 제가 하면서 복지부가 이런 데 가서 생활시설, 과거에 말하는 생활시설의 통계를 잡아야 하는데 이 생활시설의 통계가 별도로 잘 안 나와 있어요.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공동시설 과정을 우리가 말해서 탈시설화된 대안적인 주거형태들을 같이 거주시설로 같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생활시설인데 생활시설만의 통계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고 제가 또 잘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가 지방이 양된 사안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시스템, 통계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졌고 또 용어 자체가 생활시설이라는, 생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거주시설, 잠만 자는 곳이죠. 거주시설로 바뀌서 용어를 바뀌서 실제로 생활시설이 거주시설화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시설장애 이런 건 족보도 없는 용어일 뿐더러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야베를 심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시설장애인 인권 강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휠체어장애라고 하면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의 아이덴티티를 휠체어에, 기계에 불과한 휠체어에 그냥 귀속시켜버리는 그런 낙인을 주는, 휠체어 이용자야 되는데 휠체어 장애인 이렇게 쓰는 것처럼 시설이용자나 시설보조자, 이렇게 써야 될 것을 시설장애인,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낙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설장애인 인권 강령.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 자체가 이미 특정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 내부에서 물론 일부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시설 운영자들이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전국에서 가장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이 근래에 서울시내에 있는 혹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거기에서 시설 안에 들어와서 인권캠프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걸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제가 보기에 시설 속에 있는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장애인 아이들의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설의 운영자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이 뭘 느꼈을까. 18살, 17살 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머리가 아주 영민한 아이들이 시설에서 며칠 동안 같이 살면서 거기 사는 거주인들을 보면서 동등한 인간으로 느꼈을까. 아니면 나는 나중에 이 사업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시혜적인 의미였나,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설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 청중토론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 질문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 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자: 저는 임마누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박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2000년도 초에 김용득 교수의 강의도 감명 있게 들었고요. 실무자였을 때 뜨겁게 시리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많이 빠졌어요. 현실에 대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지금 발바닥시민 연대신가요? 김정하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컷 뉴스에 기사가 났는데요. 기사내용이 아동학대 분포를 보면 친부모가 80%가 해자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5%, 그리고 보육시설이 3%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쪽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재가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보면 SOS 25시인가요? SBS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재가장애인분들, 지적장애인분들의 인권침해,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점은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시설로 입소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재가장애인분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어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거주시설의 문제로만, 거주시설이 폐쇄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또 학교와 복지관, 모든 이용시설, 예를 들면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들 자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활동보조인 자격이 72세 노인분이 뇌병변장애인이 지식인에 올랐어요. 저는 활동보조인 72세인 노인분한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걱정한 바 아니나 다를까 외출할 때 끊임없이 쏟아지는 잔소리, 그다음에 끊임없는 참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보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단지 복지시설의, 노인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슈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 말고 다른 학교나 이용시설이나 한국사회 인권 차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윤삼호 선생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효율성이 복지시설에 편중돼 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복지세를 도입하시죠. 복지세, 복지에만 쓸 수 있는 복지세를 도입해서 있는 예산을 깎아서 더 나눠 가지고 사회복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복지세를 도입해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같이 자립생활센터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듣고. 먼저 손을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최세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면 우리 이상희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열이 바쳐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이 시설에서 완전 인간이하,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내가 이 소장 말을 듣고 너무나 고생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절에는 아예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동물이에요, 동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있다가 텔레비전 보고 또 때가 되면 밥 먹고 자고. 그게 24시간 동안 계속 해 봐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가 동물이에요. 자립시설에 있는 우리 모든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뭔지 그걸 좀 잘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아까 윤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한 반 정도, 반 정도만 없어져도 예산이 얼마나 남아요. 그 예산을,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예산 말고 외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설 서비스의 어떤 열악한 여건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손드신 분.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딸이 41살인데 발달장애 2급인 자식을 지금까지 길러온 엄마입니다. 여기를 지금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 좋으신 말씀이고 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으로 장애인 한 개인의 인권을 살려주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진정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그 장애인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그에게 맞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설? 탈시설?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 41년 동안 제가

그 아이를 길러왔을 때 안 해 본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저 자신의 어떤 걸 포기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 지켜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습니다. 장애인 부모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걸 마치고 또 정신지체고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관 훈련 까지도 다 마치고 직업재활센터까지도 다 마치고 하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 있을 때 겪는 것이 저도 재활원에 보냈고 또 정신지체인 복지관에서 훈련도 시켰고 또 취업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면 제가 그 사는 구청장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삶의 질이 좋다는 우리 구에서 과연 이런 부모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게 삶의 질이 되는 것이냐. 그 구에서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진정한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1등 구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구청장한테 편지를 썼더니 그 구청장님께서, 저는 겁이 나서 사실은 그때 저를 불러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소도 밝히지도 않고 그것만 썼는데 저를 굉장히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 부모와 그 아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구청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2% 내지 3%의 장애인을 주셨는데 1%를 어머니가 맡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 친척과 내 자녀한테는 그것이 비껴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만이 어머니가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소연했을 뿐이지.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구청장 비서실에 애를 두게 했습니다. 그 구청에서는 깜짝 놀랐죠. 왜 비서실에 두게 하느냐. 구청장 비서실에 뒹야만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국장들이나 결재받으러 왔을 적에 이 아이가 다른 하찮은 일을 쫓았더라면 굉장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서실에 두면서 3개월을 지켜보면서 모든 국장들이 왔을 때 인사를 먼저 그 아이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공익으로 나온 공익생이 너는 왜 일도 안 하면서 여기에서 놀고 있느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말 그걸 감당해낼 수 없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년 반을 구청장 비서실에 있다가 그게 힘들었다고 가정복지과로 가서 가정복지과에서 또 일을 하게 하고 굉장한 배려를 구청에서 해 줘서 일을 했는데도 저희는 못 버텨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룹홈에다 넣었어요. 그건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훈련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그룹홈은 외국에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로 샘플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런데도 제가 가서 봤을 적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왜, 잘해 주죠. 잘해 주지만 그 내면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모가 지원해 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더라도 그 전에, 그룹홈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20대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들어보는 것이 끝나고 주말에는. 그래서 저는 그 4명, 그룹홈 4명과 그 선생님까지 5명의 표를 구해서 쫓습니다. 데리고 가서 보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다른 부양인들도 저 어머니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껴가면서. 왜, 자식을 위해서죠. 내 자식을 위해서니까. 그랬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애가 집에 오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41년이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베드로학교를 보냈습니다. 왜, 저희가 17만원 봉급을 받으면서 13만원을 학교에 교육비로 지불하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왜, 조기교육을 시키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는 그러니까 나머지 네 식구는 13만원으로 내고 4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쓰자면, 정말 소설을 써도 모자란데 이걸 보면서 정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걸 가지시는 것도 장애인 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일자리를 어떤 장애를 가졌었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아이가 나름대로 부모가 돈을 갖다주더라도 네가 한 달에 얼마짜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29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질문자: 그래서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은 정말 저는 탈시설 적극 찬성하고요.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아이가 밥벌이를... 밥벌이가 10만원만 벌어도 밥벌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자긍심을,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일반 사람들에게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어질 때 진정한 한 장애인의 인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달장애인 한 명을 가진 지

역사회 서비스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단지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재편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일단 나온 말씀들을 우리 발표자, 토론자 중에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하시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정하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정하(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영광입니다. 주제 발제자한테도 질문하지 않으신 걸 저한테 하셔가지고 영광이고요. 제가 시설종사자한테 탈시설 얘기하면 어디에서나 하는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시설이 유지, 존재가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동학대 사례도 얘기하시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저한테는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도 인권 침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주제가 거주시설 주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염전사건부터 시작해서 노예사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건들을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나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시설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부분을 예를 드셨다시피 아동학대가 친부에 의해서 그렇게 성폭력이나 학대 여러 가지가 친가정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의 문제를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장애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장애 성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존재론의 존재여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좀더 발전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우리에게 유지, 필요한 것이 물론 학대 때문에, 재가장애인의 학대 때문에 일시적 쉼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엠마하우스쪽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편차, 그러니까 잘하는 시설 일부를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설의 편차를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속에서 거주시설에서 어떤 문제, 인권문제 뭐, 인권지킴이 하나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우리나라 장애복지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예산총액에 넣는 건 당연히 힘든데 그건 그냥 말처럼 쉽지가 않은 문제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복잡한 부분에 연결돼 있어서 우리 같은 수준에서 예산만 늘리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금 제한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 구성비를 먼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예산 구성비에서 극소수의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만 이용하는 시설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이용률이 10%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실제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예산하고 혹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기관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 당사자에게 예산이 직접 지불되는 여러 가지 예산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의 예산은 제가 서울시가 28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중의 80%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생활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그중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먹고 자고 있는 것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프로그램 지원비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에 생활비 외의 재활 프로그램 지원비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생활인들은 뭘 하나. 그냥 아침 8시에 아침밥, 오전에 텔레비전 시청, 12시 점심, 오후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5시 저녁, 그리고 저녁 후 텔레비전 시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설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많다고 하는 수준에서도 실제로 생활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인들은 거의 다 거주시설, 아예 생활시설, 먹고 자고 하는 생활시설. 사실상 시설이 지금 현재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운영되려면 배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인당 4,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있고 하면. 시설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나마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이 그야말로 생활하는 데 거기는 거주공간이고 생활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지금 예산의 배 정도 되어야 된다, 실제로 미국에도 요양시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연간 6만에서 7만불,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한 장애인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데 6에서 7만불이, 우리 돈으로 7000만원 내외가 주정부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그 정도 들어가야 사실은 시설도 어느 정도 살 만한 곳이지 지금 같은 적은 예산으로는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질문자**: 제가 자립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활동보조인. 인정하는 지켜보기라고 하는 게 있죠. 활동보조인들이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명이 계속 상주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비하고 지켜보고 생활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인건비가 쓸데없는 겁니까?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그건 어차피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켜보기 그건 발달장애, 자폐성 발달장애 활동보조 서비스라기보다 서포트의 일환이고, 지켜보는 게 가만히 앉아서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을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지적판단을 서포터들이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적 판단이라든가 그런 영역을 서포트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 생활서비스에 대해서 2800만원이라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탈시설 됐을 때 서울시에서 연간 한 명의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인가, 이걸 아까 김용득 선생님 말씀따라 충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2800만원, 지금 현재 수준의 예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 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이다라는 것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용들은 들으신 분들의 판단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런 건지 예상 시간을 49분이나 초과해 가지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자리를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미흡하지만 오늘 토론을 하여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시설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시설에 계시는 입장들이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저도 교수라는 직업도 정권이 바뀌면 이 사회의 대부분이 기득권자니까 재들은 나쁜 놈이니까 조져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교수를 조지는 제도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실적이 많은 교수는 봉급을 많이 주고 적은 교수는 적게 주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맨날 그 일을 정권 바뀔 때마다 당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제

도를 해 가지고 한 번도 교수사회를 제대로 바꾸는 정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학을 개혁하려면 교수를 개혁주체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항상 그 순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반복이 아닌가 하는 게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시설이 어떤 너무나 어떤 인권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건 서비스집단이 아니라 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아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제적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각에서는 적으로 간주를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감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감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버리고 그 사람들을 개혁에 동참시키는 노력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안타까운 건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약자로서 장애인들이 당하는 일처럼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우리나라 비영리 법인 중에 가장 약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인, 교육법인, 온갖 권력을 가진 법인들은 공익이사가 많아요. 제일 약하고 만만한 곳인 사회복지법인 하나 죽여가지고 공익이사. 실제 도가니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으면 그런 종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을 다 공익이사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교육법정도 많이 생기고. 개들은 권력이 세니까 못 보내고 단지 학교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예를 들면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에는 다 공익이사를 보내는 이것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약자 죽이기의 일환이다,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실제 어떤 큰... 지금 전국장애인 8만을 가둬놓고 있는 의료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인권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의료법인에 우리가 공익이사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힘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 문제들을 외부 감시체계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또 같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체계가 가동되어야 될 필요성과 함께 시설예후에서 스스로를 자정하고 바람직한 시설, 인간적인 시설,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이번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토론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기꺼이 1시간 더 시간이 오버됐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정하(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사회자님, 죄송한데요. 잘못 애

기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걸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 터진 것은 인화학교로 알고 있지만 인화원, 바로 붙어 있는 생활시설,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걸 왜 시설보고 그러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만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할 수 있어요. 다른 일반학교들 사회복지 법인 운영할 일 없어요. 학교법인이 다 운영하죠. 그리고 사회이사제도, 외부이사제도, 이런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회복지사업 바뀌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사립학교법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사회복지법인만 당했다, 이런 여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외부이사제 갖고 소용이 없다, 다른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회복지법인들쪽에서는 외부인사들 때문에 자기네들의 자율권을 굉장히 침해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외부이사 도용하는 퍼센테이지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의사결정권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퍼센테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집어넣기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게 그 법을 일부 개정한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광주 도가니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왜 장애인 시설 보호보고 그래? 법인 보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좌장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쪽의 의견도 전달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폐회선언

○사회자 이권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장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카운터에 보면 자그마한 떡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받아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자료를 한 350부 정도 가져왔는데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주소를 적어주시면 사무실에 남아 있는 분량을 가지고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